

헌재, 내일 첫 준비기일... 탄핵심판 시작

수사기록 이의신청도 결정 “박 대통령 출석 요청 없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보운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제1회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낸 이의신청 결정도 준비기일 때 결정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한다.

다만 준비기일이 단 한 차례로 끝날지는 유동적이다. 국회 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측의 준비나 진행상황에 따라 횟수나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기일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로 이뤄진다. 박 대통령 등 당사자들도 비공개 신청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배 공보관은 “헌재가 준비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1회 준비기일이 오는 22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오는 21일 까지 양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국회 대정부질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 준비기일을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회 측이 헌재에 이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접수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검사나 검찰이 수사기록 이의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첫 준비기일에 이의신청 결정을 내

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헌재가 이의신청 결정을 이틀이나 미뤄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헌재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서 제출 요구를 한 것”이라며

“헌재 입장도 기록을 빨리 받아 검토하고 싶고 당사자의 협조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을 결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준비기일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 압축 등 본격 변론을 준비한다. /뉴시스

특검팀 “모든 준비 다했다”... 오늘 오전 현판식

“비공개 사전 접촉 박상진·장충기 등 10명 미만... 박 대통령 일정 수사 대상 포함시 검토”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사전에 접촉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사전 접촉은 현재 수사 준비 상황, 수사 기밀, 당사자 형편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10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제3의 장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할 예정이지만, 추후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가급적 특검 사무실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대상자가 비공개를 원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접촉한 인원 중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

실 사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독일계자로 43억원 상당을 보냈고, 이 돈은 회사 쪽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승마 컨설팅 등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에 35억원 상당을 특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사장과 장 사장이 연이어 소환되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현재 이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과 접촉한 4년의 일정을 전수조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는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의혹 제기 상태”라며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수사개시 여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박 특검이 간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 20일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건 검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보안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절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를 사전 접촉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 내년 예산안 1조4303억원 의결

전주시의회가 20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전주시 예산안 의결을 함으로 201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1조2192억원, 특별회계 2111억원, 총 1조4303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 정례회 등 모두 11차례 회의에서 총 2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38건의 시정질문과 6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국정과제를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김명지 의장은 폐회식에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뜻깊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온 시간이었다”며 “새해에도 전주가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김관영 의원 ‘보험사 직원’ 보험사기 방지법 발의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기중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20일 김관영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는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5초간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5초간 살인사건에 대해 “대통령 헌정파괴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박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살인사건의 전모도 밝혀져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로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는 박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회장, 정운회 비선실세 문건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운회 씨가 등장한다”며 “현 정권 최고 권력자들의 등장만으로도 사건의 무게와 심각성은 예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둘러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진실을 은폐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고 이 청장을 비난했다. /뉴시스

‘새만금신항만 예산 증액’ 김중희 의원도 합작품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 질의하고 사업의 부진을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새만금 신항만이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 계획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첫째, 이미 군산항에 5만톤급 접안시설이 20선석이나 완공되어 있으며 둘째, 향후 대한민국의 대 중국 물동량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약 4/1을 차지할 것이며 셋째, 중국과 최단거리로 물류비 절감에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수심 15~40미터로 대형 선박이 바로 항구에 접안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지속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 기재부를 상대로 전 방위적으로 예산 증액에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새만금 신항만 예산이 현행 3,281억원에서 무려 7,153억원으로 증액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김제=곽노태 기자

다함께 열거하는
음도도시 완주

농토피아 완주 모바일 완주

쭙쭙 자라라, 완주의 꿈

군정슬로건, 3대 핵심정책으로 완주가 더 크게 도약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삶의 질 향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